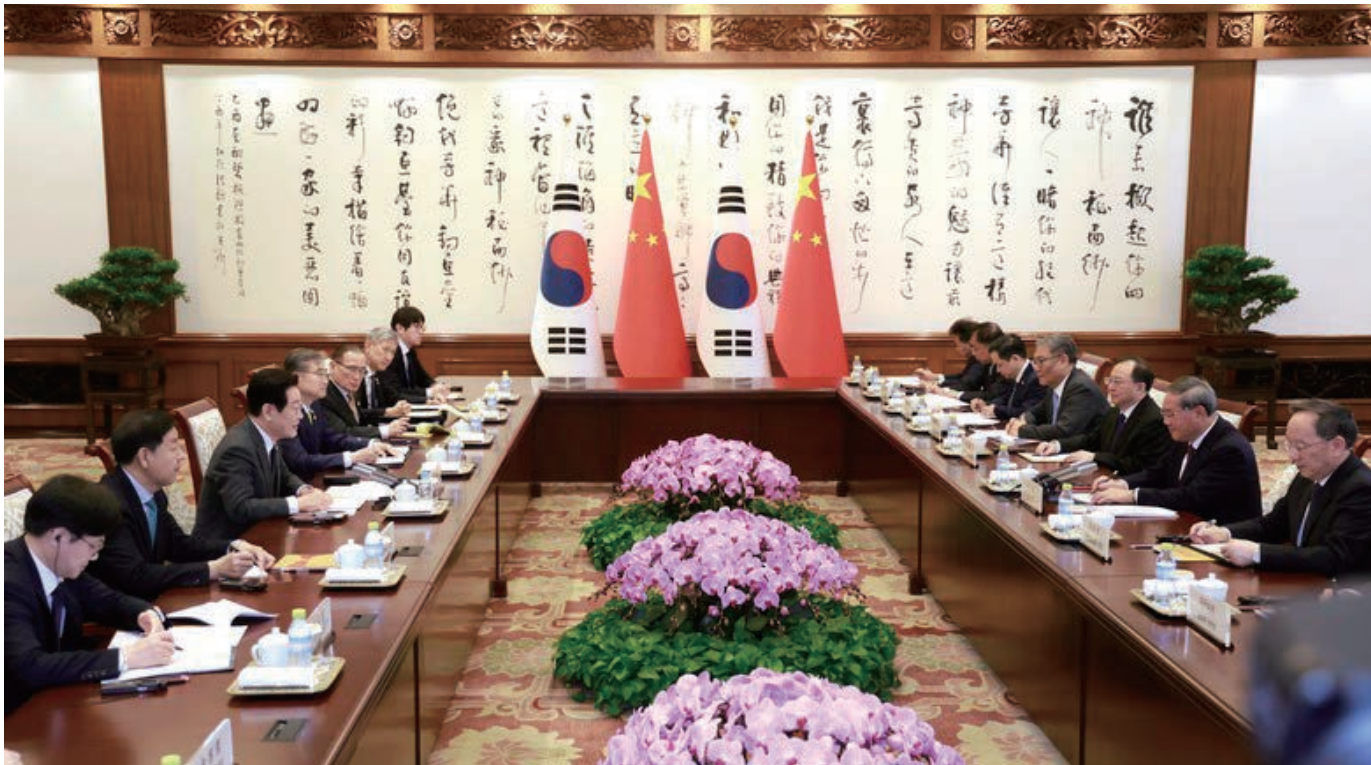




이재명 대통령 "한중관계 되돌릴수 없게 공고화" 리창 "협력범위 확대"



중국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베이징 조아대에서 진행된 리창 총리와와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6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중국의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만나 "이번 일정을 통해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와 접견 및 오찬을 하면서 "어제 시진핑 주석과 두 차례 회담을 통해 민생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지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께서 중국의 경제를 총괄하면서 민생 안정을 담당

하며,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측 대표로서 여내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기여하고 계신다"며 "민생과 평화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하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국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면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도 각각 리 총리를 만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로 총리님을 만나는데, 정말로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진다"며 "한국에는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웃은 새것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고 소개했다.

"정말 오랜 친구처럼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해 한중 관계의 획기적 발전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리 총리도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며 "이 대통령과 더 솔직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중 정상 간의 전략적 지도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며 "양측이 각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

민생·평화 입각 한중관계 발전"...올바른 궤도로 발전하도록 추동"

안보·국방채널 소통 제안..."한중일 협력 틀 속에서도 논의 이어갔으면"

한중 FTA 2단계 협상 연내 마무리 공감대...'소년공 출신' 공통점 언급도

진함에 따라 반드시 양국 국민에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이 회담을 진행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구체적 계획을 지 도했다"며 "또 이에 강력한 원동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시중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며 "한국과 선린 우호를 견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해 양국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발전하도록 공동하고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 더 많은 실질적 성과를 거둘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과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외교 채널만이 아니라 안보·국방 분야에서도 필요한 교류와 소통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리 총리는 한반도와 여내 평화·안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소통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의 틀 속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리 총리와 다시 만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제15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중 협력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리 총리는 "대의 개발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의 기회를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공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양측은 세계 시장에서 한중 기업의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현실을 '선의의 경쟁'으로 이끌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신산업 분야 협력과 산단 협력 등 상호 투자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서비스·투자 분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으로 일했던 자신과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로 일했던 리 총리의 경향이 유사하다는 데 주목하며 "실사구시를 중시하는 리 총리의 미래 지향적 태도와 합이 잘 맞을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회의장 격인 자오저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에게 "굳은 신뢰의 기반 위에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전인대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자오 위원장과 만나 "저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의 정치적 신뢰와 민간 부문의 우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양국 관계 발전에 전인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회 전반의 인식과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양국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자오 위원장이 그간 한중 교류에 기여한 부분과 관련해 "우리 측 인사들의 방중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신 것으로 안다"며 "2012년 산시성 당서기 시절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도 유치하시며 한중 경제협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신 점도 잘 안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재봉 기자

국방비 미지급 공방...국민의힘 "얼빠진 정부"·민주당 "일시적 지연"

野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할 말 잃어...재경부 장관 책임 물어야"

與 "지난 정부부터 누적된 세수 부족 탓...공포 마케팅 멈춰라"

국회 여야는 6일 일부 국방비 예산(1조3천억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얼빠진 정부"라며 관계 부처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인 절차상 지연"이라며 정부를 염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다

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라며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하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다"며 "그야말

로 얼빠진 정부"라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방중 일정을 소화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귀국과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부터 지시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에서부터 (업무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틈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안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절차상 지연"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부터 누적되어 온 세수 부족과 재정 구조의 한계가 연말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안보를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공포 마케팅'을 멈추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책

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재정 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되면서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1조3천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작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

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 면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본회의를 열어 몇 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8일 본회의를 개최하지는 이유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그날 2차 특검, 소위 종합특검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봉 기자



수원시 무상교통 버스비 지원

2026년 어디서든 걱정없이, 이동이 자유로워 집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70세 이상 어르신 | 19~23세 사회초년생 청년 | 24세 이상 장애인